

[발표 2]

빈곤 심도별 내부 구성과 결정요인

손병돈(평택대)

1. 서론

우리 사회의 빈곤상황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빈곤상황과 관련한 특징 중의 하나는 빈곤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하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1996년 9.5%, 2000년은 14.5%, 2003년은 18.2%, 2006년은 19.3%로 지난 10년간 거의 10%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빈곤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더러, 빈곤의 심도도 더욱 깊어졌다. 중위소득의 20%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의 규모는 1996년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0년에는 2.9%로 전체 빈곤인구의 20.0%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5.7%로 전체 빈곤인구의 31.3%,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이현주 외, 2006).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의 빈곤상황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우리사회의 빈곤상황과 관련한 대표적인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빈곤의 여성화, 노인빈곤층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증가 등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여성가구주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석재은, 2004). 이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의 절대다수가 빈곤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현수, 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구인회, 손병돈, 2005). 이러한 전통적 취약계층의 빈곤증가와와는 다른 경향인 근로빈곤층의 증가도 최근 우리사회 빈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근로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 취업자의 빈곤율이 대략 10% 내외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김교성, 최영, 2006; 홍경준, 2005).

이처럼 우리사회의 빈곤상황은 규모와 심도면에서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내부구성도 더욱 복잡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의 빈곤층은 빈곤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빈곤의 정도에 따른 그 결정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빈곤의 정도가 극히 심각한 극빈층과 보다 덜 심각한 일반 빈곤층간에 그 내적 구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빈곤정도별 내부구성과 그 결정요인이 규명되면, 빈곤정책도 빈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결정하는 요인이 상이하다면, 그에 따라 빈곤정책도 상이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빈곤의 정도를 기준으로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으로 구

분하고, 두 집단 간 내부 구성과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2006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이 목적이므로,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2006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 담고있는 정보는 소득과 같은 유량(flow)의 경우 2005년 1월에서 12월 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과 같은 저장(stock)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빈곤층의 분류

본 연구에서 빈곤 여부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보다 적으면, 빈곤한 것이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보다 많으면,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득 개념은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개념을 사용한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1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정의된다. 가처분소득은 이러한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총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박찬용, 강석훈, 김태완, 2002).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소득은 가구규모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1인 균등화된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¹⁾. 이렇게 정의된 소득개념에 근거하여 빈곤집단을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으로 구분하였다. 극빈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25%미만인 집단으로 정의하며, 일반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25-50%에 이르는 집단을 말한다.

1) 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는 Y_i / \sqrt{n} 이다. Y_i 는 가구소득이고, n 은 가구원 수이다(OECD, 1994).

3) 주요 변수의 정의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
종속 변수	빈곤 여부	중위소득의 50% 미만	빈곤=1, 비빈곤=0
	극빈 여부	중위소득의 25%미만	극빈=1, 비극빈=0
	빈곤집단 구분	중위소득의 25% 미만은 극빈층, 중위소득의 25.50%는 일반빈곤층, 나머지 비빈곤 집단	극빈층=1, 일반빈곤층=2, 비빈곤층=3
독립 변수	가구주 성	가구주의 성별 구분	남성=1, 여성=2
	노인 가구주 여부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그 외 비노인	노인가구주=1, 비노인가구주=2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 졸 이상=3
	공적 이전 수급	공적 이전 급여 수급여부	사회보험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하면 1, 수급하지 않으면 2
	사적 이전 수급	사적 이전 소득 수혜 여부	사적 이전소득 있으면 1, 없으면 2
	가구주의 취업지위	가구주의 취업상 지위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1, 임시/일용직/자활, 공공근로/무급가족종사자=2, 자영업=3, 고용주 및 상용직=4
	장애 또는 만성 질환 가구원 수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원 수	연속변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원 중 취업자 수	연속변수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방법은 로짓분석과 다항로짓 분석이다.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별한 모델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별한 모델 2가지이다. 극빈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극빈 여부를 판단한 모델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한 모델 2가지이다.

다항로짓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극빈층, 일반빈곤층, 비빈곤층으로 3범주로 구분하여, 일반빈곤층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Multinomial Logit 분석에서도 모델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모델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모델 2가지로 설정하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모델은 로짓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전소득 관련 2개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를 분석모델에 투입하였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모델은 <표 1>에 제시한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모든 통계분석 SPSS for Windows 1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의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 또한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빈곤율은 24.1%, 극빈층 비율은 11.8%로 추정되었으며,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빈곤율은 19.3%, 극빈층 비율은 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 이전은 극빈층을 일반빈곤층으로 이동시키는데 주로 기능하며, 일반빈곤층을 비빈곤층으로 이동시키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을 구분할 때, 극빈층 11.8% 중 공적 이전으로 3.6% 포인트는 일반빈곤층으로, 2.9% 포인트는 비빈곤층으로 이동하였고, 일반 빈곤층 12.3% 중 공적 이전으로 비빈곤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2.7% 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의 내부 구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특성은 노동 관련 요인이고, 인구학적 관련 특성은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빈층, 일반빈곤층 모두 단독가구의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노인 가구주 비율이 비빈곤층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지만, 두 집단 간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반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집단을 구분할 경우 가구주가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율은 극빈층이 일반빈곤층 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고, 취업 가구원 수도 극빈층보다 일반빈곤층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집단을 구분할 때,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상용직에 비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일 경우, 일반빈곤층에 비해 극빈층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집단을 구분할 때 공적 이전을 수급하는 경우가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일반빈곤층 대비 극빈층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인구학적 변수나 노동 관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다. 첫째, 빈곤층의 탈 빈곤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이전의 수급자격을 극빈층뿐만 아니라 일반빈곤층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급여수준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공적 이전을 통해 일반빈곤층이 비빈곤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다항로지 분석한 결과, 일반빈곤층과 극빈층을 구분하는 유일한 요인이 공적 이전 수급여부였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 된다. 둘째, 빈곤층 대상 일자리 창출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극빈층 여부 결정요인 및 빈곤층 여부 결정요인 모두 취업자 수 및 가구주의 취업상태와 같은 변수들이 중요한 요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 짓는 중요 요인도 이러한 노동 관련 변수들이었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 된다.